

호남출신의 호남 배신...한덕수·이낙연 불쾌한 ‘호남팔이’

한덕수, 5·18 민주화운동 ‘광주사태’로 비하...오락가락 정치행태
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대표 출신이 ‘반 이재명’ 국힘과 빅텐트
광주시장·전남지사 “호남 뒤통리 출신들 후안무치에 모멸감 느껴”

‘호남 뒤통리’를 지낸 한덕수·이낙연이 사실상 ‘반(反) 민주당, 반(反) 이재명 연대’에 나서면서 “호남을 배신하고 내란세력과 연대하고 있다”는 분노가 지역에서 들끓고 있다. 과거 민주당 집권시 총리를 지내면서 호남인으로서 ‘정치적 알맹이’만 독점하고, 이제는 ‘호남의 이름을 팔아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비하하고, 이 전 총리도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오락가락하는 정치행보를 이어가면서 이들의 ‘정치적 진정성’마저 실험대에 오르고 있다.

6일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서울에서 만나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이 고문과 오찬을 마친 뒤 “이 총리(이 상임고문)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는 많은 충고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더 이낙연 전 총리님과 협의해 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성장을 내걸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퍼주기, 기본소득을 염두에 둔 내용”이라며 “민주당의 정책은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굴러 떨어뜨리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두 집단(민주당·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는 현실 앞에서 한 총리(한 후보)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찾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선은 헌법개정을 통해 정상 국가로 갈 것이나,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로 갈 건지의 대결”이라며 “한 총리와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 총리의 만남은 사실상 여권발 ‘대선 연대’를 염두에 둔 행보였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 고문이 앞서 ‘반이재명 빅텐트’와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반이재명 행보에 나섰고, 한 전 총리도 국민의힘과의 빅텐트 전제로 출마를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호남 태생을 강조하며 요직을 도맡았던 이들의 정치 행보에 지역민의 실망감도 깊어지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에서 5년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남지사를 역임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 뒤통리와 당 대표까지 지냈지만 호남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도 지나친 내부 폭로전을 이어갔고, ‘민주당 원탐’에 대한 열망도 저버렸으며 이번 조기대선에서도 ‘호남과 민주당 내 뒤통리’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전 총리도 “필요에 따라 출생지를 호남과 서울을 오갔다”는 비난과 함께 최근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나도 호남사람입니다”를 외친 뒤 ‘광주사태’라는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자신의 고향인 호남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 ‘빅텐트’ 움직임을 겨냥해 “한덕수 대행이 빅텐트를

바라며 출마한 모양이지만, 빅텐트는 없고 빈텐트만 있을 것이다”면서 “내란 정권에 대한 미련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미움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예비후보의 ‘호남사람’ 발언을 두고 “모멸감을 느낀다. 호남 무시 발언이다”면서 “막중한 책임을 땀겨운 후안무치한 자로 역사와 정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비명(비 이재명)계로 전복 출신인 박용진 전 의원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이낙연 전 총리의 보수계 빅텐트 합류 가능성에 대해 “이 전 총리가 정치는 물론 상식적인 선을 넘고 계산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총리,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더 멀리는 국민의힘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상상이 아닌 국민의 상식을 깨는 선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손질...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 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민주노동당’ 당명 변경 권영국 대표 대선후보로 승인

정의당이 6·3 조기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명칭으로 활동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5일 당원총투표 결과 당명 변경안(정의당→민주

노동당)이 71.37%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당명 변경은 조기대선에서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민주노총 일부 산별노조 등 노동·사회운동단체와 결성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것이다. 이번 당원 총투표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로 승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hb@

김문수 “당이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으려 해”

경북 일정 취소후 서울로...지도부 “당원 찬반 여론조사 실시” 압박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간 충돌 사태가 이틀째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 후보의 요구를 수용해 선거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후보와 지도부 간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되레 파열음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전날 입장문에서 지도부를 겨냥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단일화를 원할까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스스로 하신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 후보를 먼저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인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도 더 이상 우리 당과 우리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며 “어느 정치인도, 어느 국정을 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 그런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권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가 일정을 소화 중인 대구·경북(TK)으로 내려가 김 후보를 직접 만나 설득과 압박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김 후보가 돌연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지도부도 다시 발길을 돌렸다.

김 후보와 지도부는 오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소

집했다”며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선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개최가 후보 교체에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한다.

김 후보와 지도부의 충돌 사태로 단일화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후보 요구를 수용해 단일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유상범 의원을 임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오늘 아침 추진본부 회의를 열려고 했고 한 후보 측도 참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지만, 김 후보 측이 거절해 1차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는 목표 아래 김 후보를 겨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일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하다고 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를 단일화 열차에 태우겠다는 포석이다.

/오광록 기자 kroh@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2차)

본 회사는 2025. 3. 31. 총주주들의 의결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7일

농업회사법인 씨앗 주식회사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대곡길 12-42
청산인 최 대 길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영준(590815-1XXXXXX)
• 최후주소: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석곡길 200-10

피상속인 망 김영준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청법원 순천지원 2024-나323호로 신청하여 2025년 4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7일

• 상속인: 김병현(870115-1XXXXXX)
전남 장성군 동하면 전자동공단지1길31

• 신고기간: 2025. 5. 7. ~ 2025. 5. 17.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병현의 주소

장흥군 공고 제2025-492호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장 흥 군 수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동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뒷밭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용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73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북광동 525-3761 • 영 산 571-7658 • 용 동 433-1503	• 문 흥 266-1960 • 신 안 222-8171 • 오 치 266-7601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부 225-6001 • 중 정 222-8171	• 동 명 222-9054 • 중 암 222-9054
남 구	• 남 부 673-6836 • 남 정 673-6836 • 진 명 671-7276	• 백 은 651-1833 • 호 바 675-6605
서 구	• 광 천 382-5788 • 서광동 369-1625 • 치 명 376-6511 • 화 정 369-1625	• 성 무 372-2352 • 문 천 376-7153 • 풍 암 603-0311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청 단 973-2900 • 광 산 944-0444	• 월 곡 959-1920 • 하 남 955-0451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 치: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
나. 근 거: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다. 목 적: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 농업진흥지역 62,195㎡ → 농업진흥지역 밖 62,195㎡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5. 4. 28. ~ 2025. 5. 13.(15일간)
나. 열람장소: 장흥군 농산유통과
다. 열람내용: 해제(안) 토지조사(열람장소에 비치)
라. 의견제출: 장흥군 농산유통과에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주 소: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1길 11 농산유통과
- 팩 스: 061-860-6872

3. 기타사항
가. 본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 계획(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 및 반송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농산유통과(☎061-860-594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	-------------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